

이낙연 캠프 ‘결선투표’ 요구에 “대통령 후보 공식선포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 경선 무효표 후폭풍
이재명 누적득표율 과반 겨우 넘겨
이낙연, 국민당원 득표율 62% 勝
“사퇴 투표수 분모값에 반영해야”
‘경선 무효표처리’ 공식 이의제기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선관위의 당 대선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명됐지만 경선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무효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발단은 10일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81.39%라는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이낙연 후보가 62.37%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 누적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가 71만9905표로 과반을 겨우 넘긴 50.29%로 대선 본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즉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투표수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분모값에 반영했다면 최종 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 직전까지 확보한 2만8399표를 합

산해 최종 득표율로 환산하면 이재명 후보가 50.29%가 아닌 49.32%로 득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집결해 ‘사사오입 철회하라’, ‘송영길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밤 10시까지 경선 결과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문을 통해 11일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찬 대표 당시 만들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른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 항이다.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제59조는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제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민주당을 향해 당헌당규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선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 8399표가 아닌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선불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경선 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익명을 밝힌 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무효표 처리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선 결과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으로,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소수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를 보고 있자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의 이의제기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지금과 비슷한 무효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득표율 계산시 사퇴자의 표를 유효 투표수에서 빼 기존 득표율을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를 제외하곤 다른 후보들은 반발했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전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포했고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도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경선결과와 관련된 사안과 논란은 민주당뿐 아니라 어느 선거에나 존재한다”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르지는 않으나 전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원팀을 이루고 민주당부 4기 재창출을 위해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된 자영업자 2.5%p 늘었다

한경연, 2년만에 25.9→28.4%로
고소득층 1.3%p, 중산층 1.2%p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업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전후 가구주 직업별 소득계층 비중 변

화를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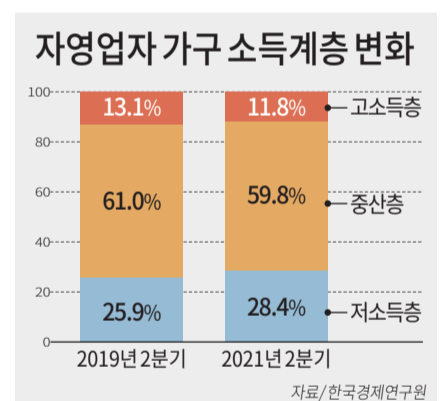
한경연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00% 초과) 13.1%,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61.0%, 저소득층(중위

소득의 75% 미만) 25.9%로 구성됐지만,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7588가구, 7만491가구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산층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9년 2분기에



는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 11.4%, 중산층 67.7%, 저소득층 20.9% 비율을 보였다. 그러다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9.8%, 중산층 70.4%, 저소득층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각각 1.6%포인트,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산층 비중은 2.7%포인트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조합 논의중”

» 1면 'DSR 조기확대'서 계속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 취약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올 연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남은 대출 여력은 약 13조5000억원으로 대출이 연쇄 중단되면서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대출 관리가 중요하지만 특정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은행권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최근 국감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